

광주·전남, 일제 식민 잔재 201개… 청산작업은 답보

비석·신사·선정비·교가 등 여전
광주시, 친일행적 알리는 단죄비
전남도, 철거·교육자료 활용 방안
교가 등 무형문화재 청산 어려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곳곳에는 일제 식민 잔재물이 여전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가 등의 사적 재산에 대한 친일 행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활동 진척이 느린 상황이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는 총 201개(광주 65·전남 136개)로 확인됐다.

광주에 있는 일제 잔재물은 비석 7개, 누정 현판 6개, 군사시설 15개, 통지시설 14개, 산업시설 2개, 기타 2개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제 잔재물을 찾아 단죄문을 설치하는 등 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12일 찾은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 금선사.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내선일체' 강조 등 일본이 조선인의 정신개조를 위해 1941년 조성한 신사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조 건물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금선사 앞에 단



지난 12일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송정신사 건물을 활용해 건립된 광주 광산구 금선사 대웅전 앞에는 친일 잔재물임을 알리는 단죄문이 설치돼 있다.

죄문을 설치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친일 인사의 행적 등이 기록돼 있다.

같은 날 찾은 광주 남구 광주공원 한 계단에는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인 광주신사 계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계단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일본 천황에 신사참배 하기 위해 '광주신사'로 올라가던 곳이었다.

지난 2019년 8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잔재물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단죄문이 세워졌다.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는 광주공원 비석 군에는 윤용렬·이근호·홍난유 등 친일 인사 선정비가 뽀뽀한 채 놓여져 있었다.

이들의 친일행적은 쓰러진 비석 앞에 놓인 단죄문으로 남았다.

전남도 역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남지역의 일제 잔재는 136개(목포 6·여수 10·순천 11·나주 3·광양 7·담양 3·곡성 5·구례 3·고흥 6·보성 1·화순 13·장흥 6·강진 1·해남 6·영암 5·무안 15·함평 2·영광 3·장성 24·완도 1·진도 3·신안 2개)로 광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석물 80개 △친일인사 25개 △군사시설 18개 △기타 7개 △신사 5개 △건축 1개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1월 용역 보고서를 발표, 식민 잔재 청산 활동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후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청산에 나선 전남도는 현재 15개의 일제 식민 잔재에 대한 청산 활동을 완료했다.

계속해서 청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남도는 잔재물 상황에 따라 교육자료나 다큐터어리즘 등의 관광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를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각 시·도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단죄문 설치 등의 조치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있지만 유형문화재를 제외한 교가나 무형문화재 등 사적 재산의 경우 곧바로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가나 친일과 관련된 명칭 등의 무형문화재는 사적 재산이라 친일 행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제 잔재를 없애거나 단죄문 등을 설치하려면 후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제 식민 잔재물이 있는 곳이 개인 사유지일 경우 토지 소유주를 찾아야 한다"며 "소유주를 찾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청산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자취 감춘 '노재팬'... 길거리 파고든 일본어 간판

한글 병기 안된 메뉴판·가격표도
이용객, 생소한 단어 불편함 호소
광주 동구 '우리가 함께쓰기' 추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른바 '노재팬' 분위기가 사그라지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는 일본어로 된 간판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한글이 병기돼 있지 않거나 메뉴판과 가격표까지 일본어로 표기된 매장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돼 3~4년 전까지 유행하던 '노재팬' 현상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일본 현지풍 가게들이 인기몰이 중이다. 심지어 광주 광산구 쌍암동 시리단길의 한 건물에는 일본 신사(神社) 입구의 기둥문인 '도리이'를 연상케 하는 조형물이 세워지기도 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어 간판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최근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주점을 찾았다는 대학생 김선아(22)씨는 "친구들이 주소를 보내줬는데 간판이 일본어로 돼 있어서 매장 근처에 도착해서 한참을 헤맸다"며 "일본 분위기로 꾸며 놓은 건 좋지만 간판 한쪽에 작게라도 한글로 매장을 표기해 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강모(28)씨는 "일본 음식 전문점이 많아지면서 일본어 간판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간판은 그렇다 쳐도 메뉴판이랑 가격표까지 일본어로 표기된 곳도 있다.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다"고 비판했다.

업주들은 일본어 간판이 전문성을 강조

하고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돕는다고 전한다.

동명동에서 이자카야(선술집)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일본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자주 찾는다"며 "요즘에는 매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손님들이 많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보니 간판을 변경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국어 사용 간판은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는 자체적인 간판개선사업

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 동구는 오는 23일까지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과 동명동 카페의 거리 일원에서 '외국어 간판 우리글 함께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0건이다"며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업주분들에게 한글 병기 조치를 부탁 중인데 영어 간판보다 일본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의 참여율이 더 저조한 편이다. 한글 간판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마련한 사업인 만큼 업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국밥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국밥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